

(주소) 16488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전화) 031-231-7253 (팩스) 031-278-7035

배포일: 2025. 12. 10. 보도일: 2025. 12. 11.	쪽수	사진	누리집	자료 문의
경기문화예술경청포럼 “로컬 문화생태계,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결심” 출발	4	4	<a href="http://www.ggcf.kr">www.ggcf.kr</a>	부 서: 직속 정책실 담 당: 박본수 전 화: 031-231-7253

## 경기문화예술경청포럼 “로컬 문화생태계,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결심” 출발

- ▶ 경기 남부와 북부에서 오픈테이블 형식으로 성황리에 출발
- ▶ 2026년 의제별 심화토론으로 각 지역현장에서 펼쳐질 예정

경기문화예술경청포럼은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정책 변화와 함께 경기도가 준비 중인 기초지자체 기반의 상향식 지역문화 정책의 기본 방향을 가늠해 보기 위해 경기 남부(수원)와 북부(의정부)에서 각각 11월 18일(화) 오후 2시(수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인의 집)와 12월 4일(목) 오후 2시(의정부문화역-이음)에 열렸다.

도내 31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정책전문가, 그리고 생활예술가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문화자원을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실질적 문화 자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11월 18일(화) 오후 2시에 진행한 경기 남부(수원)는 지역 문화생태계와 문화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첫 자리가 마련됐다. 포럼의 총괄 소개를 맡은 조주연 양평문화대표는 문화정책의 중심축이 대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경기문화예술경청포럼은 중앙집중형 구조를 넘어, 문화정책의 중심을 지역과 시민에게 돌리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예술가·기획자·행정이 서로의 언어와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자치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원 포럼은 2025~2026년 공론화 로드맵의 출발점”이라며 “더 많이, 그리고 제대로 예술가의 말씀을 듣겠다는 경청의 약속이 문화자치 시대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정보공유는 ‘문화자치 정책이 추구하는 것’을 주제로 이원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이 나섰다. 이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문명적 전환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문화정책 역시 성장 중심에서 생태와 공존의 패러다임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은 단

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와 가치가 관계를 맺는 '문화 커먼즈'의 장이며, 문화자치는 중앙의 통제를 넘어 시민과 지역이 스스로 자원을 조직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정책이 기후·생태·지속가능성과 결합할 때 비로소 지역문화생태계가 살아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정보공유는 '지역기반문화정책, 주민기반문화자치'을 주제로 김태현 경기민예총 이사장이 발언했다. 김 이사장은 "문화정책의 핵심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며, 주민이 직접 참여할 때 문화자치는 비로소 현실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공간을 축제로 바꾸고, 지역 스토리텔링을 창작활동으로 발전시킨 안산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이 과정에서 시민의 문화권은 더욱 견고해지고 도시의 생태계도 함께 변화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자치의 혁신은 주민에게서 시작되고, 제도와 예산은 그 변화를 지속시키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은 "경기도의 문화자치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술가는 "지역의 소멸은 곧 서사의 소멸이며, 곳곳에 쌓인 서사와 장소의 의미를 예술로 발굴해 주민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지원 행정이 과도하게 까다로워 창작을 가로막고 있으며, 진정한 지원은 예술가를 믿고 맡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참여 예술가들은 "공모 구조가 특정 기관 중심으로 고착되며 실험적 창작이 배제되고 있다"며 다양하고 작은 규모의 창작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협업해 마을의 서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가 문화자치의 실질적 출발점"이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12월 4일(목) 오후 2시에 진행된 경기 북부(의정부)는 지역 문화생태계와 문화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두 번째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2025년을 마무리하며 경기도의 상향식 지역문화정책을 모색하는 경청포럼이 수원에 이어 의정부에서 두 번째로 열렸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내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재단은 시민·문화단체와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문화자치·예술인 지원·지역 의제 발굴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심화 토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과 기초 문화재단의 정보를 연계하고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더해 경기도형 상향식 문화정책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은 로컬의 힘에서 비롯된다며,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만드는 문화생태계가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첫 정보공유는 '문화자치 정책이 추구하는 것'을 주제로 유상진 전 경기도 문화정책관이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문화권은 단순히 문화를 소비하는 권리가 아니라, 시민이 공동의 문화를 만들고 결정하는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 문화자치 제도는 조례만 존재할 뿐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며 현장의 문제를 짚었

다. 또한 “문화자치는 그저 지원사업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제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행정이 아닌 시민 중심의 정책 전환이며, 지역이 스스로 제도를 재구성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정보공유는 ‘실질적인 지역형 문화자치 기반 설계를 통한 지역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우종필 청산커뮤니티아트센터 책임이 나섰다. 우 책임은 “지방행정 중심의 기존 구조에서는 문화자치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자치가 열렸지만 문화 역량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고 있다”며 현장의 단절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읍·면 단위 생활현장에서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지역형 문화자치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자치는 중앙-지방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창의성과 공공성을 복원하는 일이며 이는 곧 지역의 생존전략”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은 “예술가들이 창작과 생계 사이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공모지원 구조는 정보 접근성이 낮아 특정한 중심으로 반복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AI 기술 도입과 관련해 “창작의 깊이를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활용해야 하며, 작품 유통·판로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공모 결과의 투명성 강화, 정보 공유 플랫폼 확대, 지역 예술가 네트워크 활성화를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예술교육·공방·순수창작 등 영역 간 경계를 넘어선 융합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청포럼에서 도출된 다수의 정책의제는 2026년에 “월간 경기문화포럼”을 통해 경기도 문화자치를 위한 세부정책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래서 이 경청포럼의 시작은 지역 문화예술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기존 발제 중심의 포럼을 지양하고, 당사자들의 발언에 주목하기 위해 오픈 테이블(Open Table)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종길 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은 “올해 수원과 의정부에서 시작된 논의가 2026년 의제별 심화토론으로 각 지역현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경기도의 문화자치 정책은 그 현장에서 결정될 것이다. 진정한 문화자치는 현장이 있는 지역에서 창작의 주체들과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행사 사진(수원)



# 행사 사진(의정부)

